

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30.(금) 한국일보(온라인), ‘임금6억’ 떼먹고 정부지원금 받은 회사...32곳 뒤늦게 퇴출

2. 설명 내용

- '24년부터 매년 전수조사*를 실시하여 임금체불, 산재 발생 등 법 위반이 발생한 기업은 지정 취소하고 있으며,

* (대상) 매년 전체 학습기업, (조사항목) 임금체불, 산재 발생 등 4개 항목
(조치사항) 총 38개 기업 지정취소(다만, 학습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직접 피해 건은 없음)

- 일정기간 진입을 제한(1년)하고, 훈련환경을 개선한 후 다시 지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도 부실·부정적 기업을 신속히 제재하고, 위반 정도에 따른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* 제재기준 세분화: (현행) 부정훈련은 해당과정만 취소 → (개선)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전과정 제한(시행규칙 개정사항)

담당 부서	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영진 (044-202-7267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훈 (044-202-7309)